

12 다음 중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업적과 성과에 따른 보상을 중시한다.
- ② 부하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고 수범을 보인다.
- ③ 구성원들로 하여금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공유하도록 유도한다.
- ④ 구성원들에 대하여 개별적인 배려를 한다.

13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으로만 옳게 묶여진 것은?

- ㉠ OO도 지방의회 부의장
- ㉡ OO도 교육청 부교육감
- ㉢ OO도 행정부지사
- ㉣ OO도 정무부지사

- ① ㉠, ㉡
- ② ㉡, ㉣
- ③ ㉠, ㉣
- ④ ㉡, ㉣

14 다음 중 직위분류제의 단점이 아닌 것은?

- ① 직무 변동에의 적응력이 약하다.
- ② 폭 넓은 안목을 갖춘 일반행정가 양성에 불리하다.
- ③ 보수에 합당한 직위를 만드는 데 불리하다.
- ④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직업공무원제 확립이 힘들다.

15 다면평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급자 외에도 동료, 하급자, 민원인 등의 평가의견을 인사운영에 반영하여 상사에 의한 일방적 평가를 보완하여 객관성·공정성을 높인다.
- ② 부처 통합시 능력보다 출신부처에 따른 평가로 인해 소규모 부처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평가나 부처이기주의 초래 우려가 있다.
- ③ 우리나라는 다면평가 결과를 공무원의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만 활용하고,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한다.
- ④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개발하려는 동기부여가 강화되므로 인기투표로 변질될 가능성을 낮춘다.

16 공무원의 행동규범에 대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등록대상자는 본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본인의 직계존·비속이다.
- ② 공무원의 청렴의무는 국가공무원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③ 공직자윤리법은 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④ 공무원을 강입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의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17 다음 중 발생주의 회계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 ① 오류 발견과 자기검증기능이 있다.
- ② 자산이나 부채를 정확하게 인식한다.
- ③ 미수수익이나 미지급비용이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된다.
- ④ 회계처리과정에서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다.

18 현행 국가재정법상 예산일정 및 운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는 다음연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정부의 동의 없이 국회는 지출예산 각 항 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로 제출해야 한다.

19 예산집행의 신속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제도가 아닌 것은?

- ① 예비비와 총액계상예산
- ② 이월과 계속비
- ③ 이용과 전용
- ④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

20 다음 중 미국 예산제도의 변천순서가 옳게 된 것은?

- ㉠ 품목별예산
- ㉡ 영기준예산
- ㉢ 계획예산
- ㉣ 결과기준예산
- ㉤ 성과주의예산

- ① ㉠-㉣-㉡-㉤-㉢
- ② ㉠-㉤-㉣-㉡-㉢
- ③ ㉠-㉡-㉣-㉤-㉢
- ④ ㉠-㉤-㉣-㉢-㉡

21 지식정보사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조직 내, 조직 간의 경쟁은 가속화되고 계층적 문화가 촉진된다.
- ② 연공서열에 의한 보상보다 전문적 기술과 능력에 의한 보상체제로 변화된다.
- ③ 신속성과 유연성을 강조하는 조직구조가 되어 강한 문화에서 여성적인 유연한 문화로 조직문화가 변화해 간다.
- ④ 정부기능이나 과제의 예측불가능성이 증가하여 기존 행정규칙이나 표준운영절차(SOP)에 의해 해결될 수 없으며, 새로운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가 늘어난다.

22 헌법상 독립기관에 대한 통제와 자율성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 ① 감사원은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감사원은 입법부와 사법부의 직원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기획재정부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예산을 사정하고 배정할 수 있다.
- ④ 감사원은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하여 결산을 확인할 수 있다.

23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나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없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 변경
- ②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범위 내 지방채 발행
- ③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 변경
- ④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자치구 간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24 다음 중 우리나라 현행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 ①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 ③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된다.
- ④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성립되지 못할 경우 준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다.

25 지방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일반적으로 지방세는 독립세 방식이지만 지방소득세와 지방교육세는 다른 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부가세 방식이다.
- ②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일반재원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으며 수평적·수직적 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
- ③ 도지사가 부과할 수 있는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취득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이다.
- ④ 자치구간 재산세 수입격차 조절을 위해 서울시특별시 자치구의 재산세는 특별시와 자치구의 공동세로 하고 있다.

2014년 군무원 행정학 해설

1. **답** ④ ④ (x) 가치판단, 목표설정, 정책결정기능 등은 행정의 정치성과 관련된 특징이다.
2. **답** ③ ③ (x) 주인과 대리인간에 정보격차 등으로 발생하는 대리인문제를 최소화(대리손실의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의 자율권 강화보다는 대리인에 대한 감시·통제나 인센티브의 강화가 필요하다.
3. **답** ④ Mckie의 끈끈이 인형효과(Tar Baby Effect) : J. Harris의 소설에서 토끼를 유혹하기 위해 사용되는 타르 인형에서 유래된 말로 토끼들이 타르를 칠한 인형을 친구로 착각해 주변에 모여들게 되듯이, 잘못된 정부규제가 다른 정부규제를 불러오는 현상을 지칭함.

규제의 무분별한 확대와 관련된 다른 용어

- ㉠ Bardach와 Kagan의 규제의 조임쇠(Regulatory Ratchet) : 정부규제는 일단 만들어지면 증가만 하고 줄어들지 않음.
- ㉡ 규제의 풍선효과(balloon effect) :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추가로 발생하는 효과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규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 매춘영업장 단속 강화 → 유사 성행위 업소 증가
- ㉢ 규제의 피라미드(Regulation Pyramid) : 규제가 규제를 낳아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점점 증가하는 현상.

4. **답** ④ 가외성은 불확실성에 대비한 행정의 여유분을 의미하므로 비용이 추가되어 능률성(경제성)과는 충돌된다.
5. **답** ③ 우리나라 행정학 연구는 미국의 현대행정학의 영향을 받았다. 법학은 일본을 통하여 대륙계의 영향을 받았지만 행정학은 대륙계나 일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따라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중심으로 형성된 슈타인의 행정학이나 관방학의 영향과는 무관하다.

우리나라 행정학의 발달과 특징

1. 전개
 - ① 1940년대 말부터 현대사회과학으로서의 행정학이 강요되기 시작.
 - ② 1950년대 젊은 행정학 교수들이 미국에 유학하면서부터 미국의 행정학이 본격 도입되기 시작.
 - ③ 1955년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교과서인 행정학(정인홍 교수) 출간.
 - ④ 1956년 한국행정학회 설립.
 - ⑤ 1959년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설립되면서부터 본격적인 행정학연구 시작.
2. 특징
 - ① 대륙계 또는 일본 행정학의 영향을 받았기보다는 미국 현대 행정학의 영향을 받음.
 - ② 미국 행정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 주체적 이론 미화됨, 무비판적 도입.
 - ③ 처방적·실천적·거시적 연구(발전행정론의 영향)에 치중한 나머지 이론적 과학성 결여.
 - ④ 우리현실에 맞는 한국적 행정철학이나 가치·방향의 정립 부재.
 - ⑤ 선현들의 전통적 행정사상·목민사상에 대한 토착적인 연구·계승·발전 부족(독일 관방학에 비견할 만한 조선시대 실학을 계승·발전시키지 못함)

6. **답** ② ③ (x) 독과점 규제는 독과점의 횡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보호적 규제정책의 사례이다.
7. **답** ④ ① 외삽법[보외법, 구간 외 추정]은 투사(projection)에 의한 연장적 예측으로 객관적·양적 예측기법, ②③ 회귀분석, 선형계획, 비용편익분석은 예견(prediction)에 의한 이론적·인과적 예측으로 객관적·양적 예측기법이다. ④ 델파이기법은 추측(conjecture)에 의한 직관적·주관적 예측기법이다.

연장적 예측 투사(投射)(projection)	객관적·양적(정량적)·논리적 예측	기존 자료 활용	비인과적 예측
이론적·인과적 예측 예견(豫見)(prediction)			인과적 예측
직관적·주관적 예측 추측(推測)(conjecture)	주관적·질적(정성적)·비논리적 예측	기존 자료 활용 안함	비인과적 예측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방법(W. Dunn)

유형	산출	근거	기법
연장적 예측	투사(投射)	추세연장(외삽법) 경향분석 귀납적 예측	자료전환법(data transformation) 격변기법(대변동법 : catastrophe methodology) 흑선기법(black-thread technique) 이동평균법(moving average)
이론적·인과적 예측	예견(豫見)	이론적 모형 연역적 예측	구간추정(interval estimation) 이론지도(theory mapping) 대기행렬이론(queueing theory) 게임이론(game theory) 의사결정수 분석(decision tree analysis) 계량적 시나리오 작성 계층화분석(AHP;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직관적·주관적 예측	추측(推測)	주관적 판단 통찰력 연역적·질적 예측	명목집단기법(nominal group method) 변증법적토론(dialectical discussion method) 패널토의, 자유토론 비계량적 시나리오 작성 역사적 유추

8. **답** ④ 쓰레기통모형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네 가지 요소는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기회의 흐름, 참여자의 흐름이다. 정치의 흐름,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은 Kingdon의 흐름창모형에서 강조하는 세 가지 요소이다.
9. **답** ④ 전략적 기획은 조직이 무엇이며(what an organization is), 무엇을 해야 하고(what it does), 왜 그것을 해야 하는가(why it does it) 등 조직의 생존과 성장에 관련된 근본적인 결정과 행동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돕는 체계화된 노력(Bryson)이다. 조직이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생각하고 수행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개념, 절차, 및 도구이다.
 - ①② (○) 하버드 정책모형은 1920년대부터 Harvard대학의 경영학 과정의 일부로 개발된 것으로 공공부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전략적 기획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SWOT로 요약될 수 있는 Harvard model의 주된 목적은 조직과 그 조직이 처한 환경과 사이에 가장 적합한 상태를 형성하는 것이다. 조직은 우선 자신의 장점 및 약점(internal strength and weakness)과 환경으로부터의 위협 및 기회(external environmental threats and opportunities)를 분석하고 확인한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조직은 최적의 전략을 수립한다. 전략이 수립되면 이를 집행하는데 가장 적합한 조직구조, 과정, 각 부문 간의 관계, 그리고구성원의 역할을 설계하고 집행에 필요한 지도력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
 - ③ (○) 조직의 변화에는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관점으로 장기적 계획수립을 강조한다.
 - ④ (x) 기획수립과정이 참여적으로 이뤄지지만 분권적 결정을 특징으로 하지는 않는다.

전통적 기획과 전략적 기획

전통적 기획	투입 지향	기술관료(전문가)에 의한 수립	중립적	선형 기획	엄격한 집행	정형적 업무 기초	불평·불만 모니터링	기획서에 초점을 둠
전략적 기획	결과 지향	참여적 수립	동원의 도구	순환적 반복 기획	신축적 집행	변화 지향	성과 모니터링	계획의 집행에 초점을 둠

10. **답** ① (x) 위생요인(불만요인)과 동기요인(만족요인)은 서로 개별적·독립적이며, 위생요인의 충족만으로는 불만만 제거할 뿐이므로 두 요인을 모두 충족시켜야 장기적인 직무의욕을 갖게할 수 있다고 보았다.
11. **답** ② ① (○) 책임운영기관은 그 사무가 다음 기준 중 하나에 맞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
 - ①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성과 측정기준을 개발하여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사무
 - ② 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무(책임 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
- ② (x) 결과와 성과를 중시하는 신공공관리론에서 강조하는 조직형태로 집행 및 서비스 전달업무인 정책집행기능(rowing; 관리기능)을 정책결정기능(steering; 정책기능)으로부터 분리시켜 별도의 기관으로 설치한 것이다.
- ③ (○) 내부시장화가 필요한 분야에 적용된다. 내부시장이란 기관 간 서비스 제공이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 이뤄지고, 기관 간의 경쟁 이뤄지는 것을 의미하며,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인다. 정부가 직접 생산하되 민간의 시장요소를 수용하는 책임경영형이다.
- ④ (○) 책임운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설치하며 설치 및 해제권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12. **답** ① ①은 거래적 리더십의 특징이다.
13. **답** ⑥ 지방의회의원(의장 및 부의장 포함)과 정무부지사는 지방직이다.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시장, 부지사)은 두 종류가 있다. 단체장에 대한 정치적 보좌역할을 담당하는 정무부시장(부지사)과 행정적 보좌역할을 담당하는 행정부시장(부지사)이 있는데 전자는 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직 공무원이고, 후자는 국가가 임명하여 내려 보내는 국가직공무원으로서 기획관리실장이나 부교육감 등과 함께 고위공무원단에 속한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모두 선출직 지방공무원이다. ㉠㉡은 국가공무원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함

구분	특별시	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정무부단체장	정무직 지방공무원	별정직 1급 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일반직)
행정부단체장	정무직 국가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 일반직 공무원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 일반직 공무원
①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를 의미함)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의 기획업무 담당실장 ③ 도의 농업기술원장	① 부교육감(고위공무원단인 장학관으로도 임용 가능) ② 서울특별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의 기획업무담당실장

14. **답** ③ ③ (x) 직위분류제는 동일직무 동일보수라는 직무급 원칙에 입각하므로 직위에 합당한 보수 또는 보수에 합당한 직위를 만드는 데 유리하다.
15. **답** ④ ④ (x) 공정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해 구성원에 대한 자기개발동기 유발 및 자기역량 강화의 기회가 촉진되지만 능력·실적보다 인간관계가 우선되는 인기투표식 평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목표성취보다는 원만한 대인관계에 치중하는 대중융합주의(populism; 포퓰리즘) 초래할 수 있다.

- 16** **답** ③ ① (○)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로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② (○)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없었던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 내부고발자보호제도(부패행위신고자보호제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④ (○) 강임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이다. ㉠ 직제 또는 정원 변경이나 예산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지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 본인이 동의한 경우 가능하다.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공무원임용령 제58조)
- 17** **답** ④ ④ (×) 발생주의는 자산평가나 감가상각시 회계공무원의 주관이 개입되므로 현금주의에 비하여 회계처리의 객관성이 부족하다.
- 18** **답** ① ① (×)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헌법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로 규정)
- 19** **답** ④ 배정과 재배정은 재정통제수단이고 나머지는 모두 예산집행의 신속성 유지방안.
- 20** **답** ② 미국 예산제도는 ㉠ 품목별예산(1920년대) → ㉡ 성과주의(1950년대) → ㉢ 계획예산(1960년대) → ㉣ 영기준예산(1970년대) → ㉤ 결과기준예산(1980년대) 순으로 발달.
- 21** **답** ① ① (×) 조직 내, 조직 간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것은 맞지만, 조직은 전통적인 수직적 피라미드 형태에서 수평적 조직형태로 변화하므로 계층적 분화(수직적 분화)는 낮아지고, 탈계층적 조직구조가 강조된다. 지식정부조직(네트워크조직, 가상조직, 이음매 없는 조직 등)의 증대는 계층제의 완화·제거하고 기존의 조직 내외의 시간적·공간적 경계를 벗어나 정보통신망에 의한 네트워크화를 확대시켜 환경변화에 유연·신속하게 적응하는 신속성을 확보하게 해준다. ① 우리나라 모든 조세는 법정주의이므로 국세는 물론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도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조례로 정할 수 없다.
- 22** **답** ② ②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에 대하여 결산확인, 회계검사는 가능하나, 직무감찰은 할 수 없다. 대통령소속인 감사원이 국회나 법원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실시하는 것은 권력분립에 어긋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내부통제기관의 통제방식별 통제대상 범위 비교

통제 내용	독립기관에 대한 통제 범위		비고
	국회·법원 헌법재판소	중앙 선관위	
기획재정부의 예산사정	○	○	독립기관을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예산편성권은 행정부(기획재정부)에 있음.
감사원의 회계검사	○	○	감사원의 회계검사는 국가의 예산에 적용되므로 독립기관의 경우도 포함됨.
감사원의 직무감찰	×	○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제외되나, 중앙선관위 공무원은 대상이 됨.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조사	×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 지방의회 에 관한 사항은 제외 됨.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의 소청심사	×	×	행정부 공무원의 소청심사로 한정.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는 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사무처·중앙선관위사무처에 소청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음.

- 23** **답** ② ① (×) 자치단체간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해야 하므로 중앙정부의 승인 필요.
 ② (○) 지방채는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나, 외채를 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이 발행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③ (×) 감사청구 주민 수도 지방자치법에 광역단체는 500명, 인구 50만 이상 시는 300명, 기초자치단체는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 주민 수 이상의 서명이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사청구 가능한 주민 수를 변경하더라도 법정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현재의 법정 범위 이상의 주민 수를 요건으로 하려면 중앙정부 중 국회의 법 개정절차가 필요하다.
 ④ (×) 광역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 기초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조합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4** **답** ① ① 우리나라 모든 조세는 법정주의이므로 국세는 물론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도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조례로 정할 수 없다.
- 25** **답** ① ① (×)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이지만,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이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부가세이던 지방소득세를 2014년 독립세로 전환하여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되 세액공제, 감면 등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국세과세표준 × 독립세율 - 공제·감면 =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등의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부가세 방식이다.